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된 만큼 현재에는 국산차와 고급가구, 모피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장 먼저 조정된 것은 국산차 세금이다. 첫 위원회에서 기준판매비율이 18%로 결정돼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제조장 반출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 국산차 세금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일례로 공장 반출가격 4200만원 국산차를 기준으로 보면 당초 제도상 과세표준이 4200만원으로 적용돼 개소세 210만원, 교육세 63만원, 부가가치세 447만원 등 총 72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특례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과세표준이 기존보다 18% 낮은 3444만원으로 적용되면서,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총 666만원 세금이 붙는다. 기존보다 세금이 5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적용기간이 3년인 만큼 자동차 개소세는 내달 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올해 상황을 지켜보고 내년에 기재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수출의 탑' 받으면 세정 지원 혜택"... 무역협회-국세청 합의

국세청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천700여개에 이른다.

### 노동부,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공제 안 해준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회계 공시 시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회계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것이다.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노조 또는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 받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다.

근로자가 납부한 조합비는 기본 1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간 조합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 30%를 받는다.

정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나뉘는 것으로 노조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해왔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계산관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